

2000. 12. 23(土)

제66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總 務 社 會 委 員 會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접수일자 및 청원자 : 2000. 11. 28 정중택외 942명
- 나. 회 부 일 자 : 2000. 12. 13
- 다. 상 정 일 자 : 2000. 12. 19(제66회제2차정례회총무사회위제4차회의)

2. 청원소개(소개의원 : 의장 장기훈)

가. 청원사유

- 인구 5,000명 미만 동에 대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의림동을 존치시키고자 인접 타 동지역을 흡수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요망하는 청원임.

나. 주요내용

- 인구 5,000명 미만인 의림동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3가지 방안 제시
 - 1안 : 성한아파트단지. 청전1택지지구. 법원뒤편
 - 2안 : 성한아파트단지. 제1택지지구
 - 3안 : 성한아파트단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태훈)

○ 법규적검토

-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6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등 각 법령에서 정한 형식과 실질적인 면을 충족한 유효한 청원으로

- 지방자치법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구역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행정적 검토

- '97. 1. 23 당시 내무부로부터(현 행정자치부) 각 지자체로 시달된 “ '97지방조직관련 업무지침 ”에는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통·폐합을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
- '98. 9. 25 중앙동과 남천동을 중앙동으로, 동현동과 두학동을 동현동으로 통합하는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후 더 이상의 통·폐합 계획 추진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구역 존·폐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적다할 것이며 다만,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상 의원정수와는 관련이 있다 할 것임
- 또한 “의림동살리기”는 의림동만의 문제가 아닌 인접 동 지역의 편입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나타난 상반된 의견 조율이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 과정에서 당해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편입의사가 확인된다면 행정구역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종합 의견

- 따라서 위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제1항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임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는 한편, 동법 동조 제2항과 동규칙 동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없 음”

5. 소수의견

“없 음”

6. 심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7. 심사보고 불임서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의견서 1부 끝.

청원 의견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

○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 제천시 의림동 39 ~ 6 거주 정중택 외 942명이 장기훈 의장과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2000. 11. 28. 당 의회에 제출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살리기에 관한 청원”은

○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응하여 제천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의림동”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면서 도시계획시행 등에 따른 변화 여건을 감안한 소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의림동 존치」를 요구하는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 그 요지라 할 것입니다.

○ 관련법과 규칙에서 정한 형식과 실질 양면의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동 청원은

-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기에 앞서 시정질문 또는 의회 업무보고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이미 2차례의 주민의견 조사까지 이루어진 사안으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
- 이 과정에서 당해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편입의사가 확인된다면 행정구역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상 의원 정수와는 관련이 있으나 5,000명 미만 동의 통·폐합 방침 적용과는 무관하다는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있음에 비추어 의림동 폐지문제는 논외의 사안이 될 것이므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이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 의회는 관계법령이나 행정상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건데 위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위 의견과 함께 동 청원을 이송하오니 적의처리 하시고 처리결과를 차기 임시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0. 12.

제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일동